

전략노트

Notes on Strategy

2021-6호

학문의 자유와 지성적 책임

김기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원장)

INSS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학문의 자유와 지성적 책임

김기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원장)

자유란 소중한 것이다.

인간 삶의 최종 목표도 궁극적 자유를 얻기 위함이라는 주장도 종교적으로나 철학적으로 공감을 자극하는 명제의 하나다.

자유는 두 가지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이다. 하나는 폭력성을 띤 정치적 억압으로부터의 자유이고, 다른 하나는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하는 이른바 숙명론적 속박으로부터 자유다. 전자는 국가의 탄생 이래 정치현장의 역사에서 공화적 자유주의 사상을 키웠다. 저항과 투쟁의 실천을 통해서였다. 후자는 인간의 생각과 행동의 자기 결정권이라는 철학적 신념을 배양했다.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나 '매트릭스' 등에서 드러낸 주제는 여기에 기반하고 있다.

자유를 향한 신념이 국가와의 관계에서 특별히 존속의 의미를 가졌던 것은 역사 이래 거의 대부분 국가들이 구성원인 개인에 대한 지배와 억압, 복종 강요와 착취라는 속성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가라는 정치적 조직 속에서 국가권력의 전횡에 저항 하면서 개인의 사적 영역을 확보하고 확장하려 했던 것이 자유주의 역사이기도 하다. 그 신념은 피와 희생의 역사이기도 했다. 그만큼 치열했다. 가까스로 얻었던 자유의 공간 속에서 개인의 자유를 지키려는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못했거나, 혼란과 다양성을 감내하는 인내심을 포기했을 때 어김없이 그 공간으로 독재, 폭정, 전체주의가 등장했다. 국가가 개인의 사적 영역을 장악해버린 극단의 형태가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 묘사되어 있다.

공화적 자유주의는 상업적 자유주의와 더불어 자유주의 사상사의 핵심축이 되었다. 마침내 민주주의와 결합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신념으로 성장해 왔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신봉하는 자유민주주의가 과연 무오류의 궁극적 이상(理想)인지는 논쟁적이다. 자유민주주의가 여타 이념과 체제적 도전들을 이겨내고 승리를 거두었다고, 그래서 역사의 발전이 마침내 끝났다고 선언되었던 적도 있었다. 그러나 이상을 향한 인간의 여정은 여전히 실천과 논쟁을 통해 진행형이다.

자유를 수식하는 개념들은 실로 다양하다. 다양한 영역에서 자유를 향한 깃발들이 펄럭였다. 루스벨트 (Franklin D. Roosevelt)가 제의했듯이, 인간이 누려야 할 네 가지의 자유도 핵심 영역으로 거론된다. 종교의 자유, 표현(언론)의 자유, 기아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다. 21세기 초에 이르러 이러한 주장에 크게 이의를 제기할 이유는 없다. 목표는 정해졌으나, 실천이 더딜 뿐이다.

학문의 자유도 중요하다. 생각하고 비판할 수 있는 자유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문의 자유를 주창하려면 깊이 생각해 뒤야할 것이 있다. 최근 하버드 대학 램지어 (Mark Ramseyer) 교수의 위안부 관련 논문은 사회적 이슈가 되었을 뿐 아니라, 국제적 영역에서도 논란거리가 되었다. 한편에서는 국가폭력에 의한 전시 성노예문제의 시대적 해석을 다시 환기시키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학문의 자유라는 가치를 내걸며 방어전 중이다. 단순한 해프닝 수준으로 끝날 일은 아닌 듯하다.

학문의 자유는 학자 개인 차원의 문제만은 아니다. 사회적 문제이고, 지식의 공공성에 관한 질문이기도 하다. 지식의 생산, 계승, 전파의 역할을 하는 학문 공동체에서는 미래를 향한 다양한 상상이 열려있어야 한다. 특히 국가(정치 권력)와 시장(자본 권력)에 의해 지적 활동이 억압받거나 재단되지 말아야 한다는 측면에서 그러하다. 그래야 지식(사상과 관념), 국가, 시장 사이에 질 좋은 긴장성이 유지되고, 그것에 기반하여 사회의 건강성이 지켜질 수 있다. 인간 사회의 미래가 지금보다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갈 진화의 탄력성을 갖게 된다는 의미다. 그래서 학문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사회적 책임이 묵직하게 주어져 있다. 학문의 자유, 생각과 상상의 자유, 그리고 비판적 시각을 가져야 할 자유는 그러한 책임을 실천하기 위한 토대와 같은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덕목이 전제되어야 한다. 주지하다시피 생각과 비판은 사적 영역의 일이다. 어떤 권력도 그것을 들여다보거나 추정하여 재단할 수는 없다. 양심의 자유, 믿음의 자유도 사적 영역에서 발현한다. 그러나 그 생각들이 말과 글로써 세상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그것은 공적 영역의 일이 된다. 생각과 믿음, 가치가 공공적 의미를 가지게 될 때, 학문은 사적 이익과 욕망, 편견을 표현하는 도구가 될 수 없다. 오히려 공공선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 된다. 더 나아가 학문연구가 인류보편적 가치에 부합하는지를 고민해야 한다. 최소한, 그 보편성에 노골적으로 역행하는 연구를 학문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지 않은지 자문해야 한다. 인종주의, 우생학, 사회진화론 등의 연구가 학문의 자유

라는 장막 뒤에서, 혹은 국가권력의 보호를 받으며 스스럼없이 진행되었던 과거를 상기해보라. 폭력 실천이나 노예제도의 억압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를 진행했다고 그것에 학문의 자유라는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을까. 학문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더 많은 성찰의 능력이 필요하다. ‘무엇을 연구할 것인가’의 질문은 ‘무엇을 위해 연구할 것인가’의 질문이기도 하다. 어떤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으며 어떤 관점으로 역사를 분석하고 있는가를 자신에게 끝없이 물어야 한다. 그래서 스스로 찾은 답이 ‘보편적 가치’에 닿아 있을 때 비로소 학문 탐구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램지어 교수가 이 연구를 시작했을 때 보편가치에 관해 얼마나 깊이 고뇌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그 당시로서는 어쩔 수 없었다’는 상황론적 성찰조차 드러나 보이지 않는다. 더욱이 엉뚱한 이론과 엉터리 자료로 악용한 것이라 그것을 학문의 자유라고 굳이 방벽을 쳐야할까 의문이다. 만약 그 연구가 국가 폭력성을 은폐하기 위한 것을 내심 목표로 하면서 시작됐다면 더 심각한 문제다. 이를 두고 학문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더 깊이, 더 겸허하게 학문의 자세를 고민하게 된다. 그것도 지금의 시대가 던지는 화두라면 화두다. 꽤 무거운 고뇌들이다.

//끝//